

□ 백두산·개성 관광으로 새로운 DMZ(Dream Making Zone) 조성

1. 주요 합의 내용과 의미

- 현정은 회장과 김 위원장의 백두산·개성 시범관광 합의는 현대아산의 독점권 재확인과 북한 관광 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주요 내용) 백두산 및 개성의 시범관광을 비롯하여, 내금강 답사와 원산 등지와의 연계 관광 등에 합의하였음
 - 주요 합의 내용은 ① 백두산 관광의 현대 독점권 제공과 빠른 시일 내의 시범관광 실시, ② 8월 15일의 개성 시범관광 실시 및 공단 개발 확대 ③ 내금강, 총석정 등 금강산 관광 지역의 확대 검토 ④ 원산 등 주요 명승지 관광의 검토와 정주영체육관 내의 현대사무소 개설 등임
 - (의미) 현대의 독점권 재확인과 북측의 적극적인 경협 확대 의지 표명, 북한 관광 상품의 다양화와 남북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의 계기 마련 등임
 - (현대 독점권 재확인) 현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9월 故정몽헌 회장과 면담한 이후 만난 유일한 기업인으로서, 이는 현대아산과 현 회장이 남한의 대북 단독 창구와 대북 협력 파트너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임
 - 특히, 김 위원장이 故 정주영·정몽헌 회장과의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 일화를 소개하면서, “금강산은 정몽헌 회장한테 줬는데, 백두산은 현 회장에게

< 현정은 회장-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주요 합의 내용 >

백두산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그룹에 독점권 제공 및 빠른 시일내 시범관광 실시 - 백두산 숙소 시설 20동 무상 임대
개성공단 ·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1단계(100만 평) 외에도 점차 확대 - 개성 유적지와 박연폭포 등을 포함한 시범관광 시작(8. 15)
금강산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금강 관광의 답사 후, 본격적인 실시 방안 검토 - 총석정 해로 관광의 당장 실시 - 관광 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 (연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수용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 등 주요 명승지 관광의 추후 검토 - 류경 정주영체육관 내 현대사무실 개설 - 개성민족음악축제 개최(8. 15), 정주영체육관에서 조용필 공연(8월중)

줄테니 통크게 사업을 해보자”고 한 것은 현대아산과 현 회장의 대북 사업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고한 지지와 신뢰를 표현한 것임

- (적극적인 경협 확대 의지)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류경 정주영체 육관의 현대사무소 개설 등의 합의는 현대아산과 기합의된 경협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행 및 본격적인 확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 (북한 관광의 다양화 계기) 금강산 관광 지역의 확대는 물론, 백두산·개성 관광과 주요 명승지 관광 허용으로 관광 상품이 확대됨으로써 본격적인 북한 관광과 남북한 연계 관광 개발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또한 금강산 육로관광에 이어, 백두산 관광의 항공 여행과 총석정의 해로 관광이 이루어지면 명실상부한 ‘육·해·공’ 북한 관광 시대 개막을 의미함

2. 백두산·개성 관광의 정치·경제적 효과

- (효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상호 동질성 회복은 물론, 백두산·개성의 추가적인 관광객 증대로 인한 관광 수입은 북한 경제 회복과 통일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치·군사적) 관광 사업의 평화적 역할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결의 비무장지대(DMZ)를 새로운 ‘통일 꿈동산’으로 거듭나게 할 것임
 - 군사적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내금강 관광을 허용하고 백두산 관광을 위해 서울~평양 혹은 서울~백두산간의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군사·항공 부문의 진전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갈등과 대립의 개성과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공단 및 관광 사업을 통해 화해·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 나아가 ‘통일과 평화의 꿈’을 만들어나가는 공간(DMZ: Dream Making Zone)으로 발전하게 됨
- (경제적) 북한 관광 및 대북 투자의 활성화로 남북경협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도 관광 대가와 수입으로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임
 - 관광 상품의 다양화와 권역 확대, 시설 확충 합의에 따른 관광 여건의 개선 등으로 북한 주요 명승지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이 열릴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강산 관광은 내금강과 총석정 관광이 허용되고 골프장과 각종 시설이 확충되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종합 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을 통한 백두산 관광이 이루어지면, 종전의 對中 관광 지출이 북한의 관광 수입으로 흘러들어가 북한에게는 경제 회복의 '종자돈'(seed money)으로, 남한에게는 내수 회복과 북한의 시장경제 지원을 통한 우회적인 '통일 기금'으로의 활용 효과가 있음
- 이외에도 정주영체육관 내의 현대사무실 개설로 그동안 합의(2000. 8) 단계에 머물러 있던 7대 경협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과 전반적인 남북경협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임

- (사회 · 문화적) 대규모 인적 · 물적 교류를 통해 민족의 뿌리 찾기와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백두산 및 개성 관광을 통해서는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 연구와 민족의 뿌리 찾기를, 정주영체육관은 체육 · 문화 · 예술 공연 교류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남북 간의 상호 동질성 회복과 신뢰 형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임

3. 향후 전망과 성공 과제

- (전망) 최근의 남북 관계 회복과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입지와 인프라 여건 등으로 성공 가능성성이 높으나,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함

- 백두산 · 개성 관광 합의가, 6.17 면담 이후 남북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 발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음
 - 특히 백두산 관광사업은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숙소 무료 제공) 표명과 함께, 우리 정부의 7대 新동력 사업의 하나이므로 성공 가능성성이 높음
 - 정부는 9월로 예정된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의 경주 · 설악산 등과 북측의 금강산 · 개성 · 칠보산 · 백두산 등을 하나로 묶는 남북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공식 의제로 올릴 계획이라고 함

- 개성 관광 역시 양호한 지리적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 등으로 8.15 시범관광 이후 곧바로 당일 관광을 추진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다만, 백두산 관광은 삼지연공항의 도로 · 항공 시설의 미비와 일기 불순으로 인한 관광 가능 일자의 제약(연간 5~6 개월 내외), 전세기 운항에 따르는 높은 관광 비용 부담 등으로 단기간 내에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현대아산의 7대 사업 역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규모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아 전면적인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
- (과제) 북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와 차질 없는 약속 이행,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남북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4차 6자회담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호한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북핵 해결과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해소가 선결 과제임
- 분단의 남북 관계 특수성과 경협의 경제 외적 순기능을 고려하여, 정부는 대북 사업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 확충과 벤처 인큐베이터 역할이 필요함
 - 관광 인프라 개선에 위한 과감한 정부 지원과 함께, 북한 주요 명승지를 세계 문화 · 관광유산으로 등록하여 국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대출 제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일정 규모에 한 해 자금 출처를 면제해주는 장기 저리의 국공채를 발행하여 시중의 부동자금과 지하자금을 생산자금과 통일자금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 북측도 갑작스런 관광 중단이나 무리한 대가 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측의 자본 · 기술 제공에 대해 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통 분담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관광의 자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통(통행 · 통관 · 통신) 보장과 함께, 법적 · 제도적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